



미국-이란
합의
2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트럼프, 머스크, AI 거품
3면

이재명 '중도보수
확장'의 역설
4면

'36주 낙태' 사건
항소심
10면

북아일랜드
반이민 폭동과
반대 시위 11면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인정 요구
운동 12면



이재명 '중도보수 확장'의 역설

여당은 내용에 빠지고 극우는 살아나다



관련 기사 4면
+ 온라인 관련 기사 '슬슬 위태로워지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중도 줄타기'



미국-이란 합의

미국 제국주의의 쇠퇴와
서아시아의 새로운 세력 균형

미국이 서아시아에서 굴욕을 당했다. 트럼프는 이란과의 평화협정 초안(양해각서) 합의를 “위대한 합의”라고 자랑했다. 트럼프는 이번 합의로 미해군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즉시” 해제되며, 금요일(19일)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초호화판 격투기 경기를 열며 축배를 들었어도 미국의 패배를 가릴 수는 없다. 미국은 전쟁 비용으로 250억 달러를 쓰고도 패배했다. 전쟁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1,000억에서 2,00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요구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전쟁 비용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번 합의는 실효성 없는 60일짜리 양해각서에 서명해 사실상 휴전을 연장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심지어 그 사이에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다. 양해각서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 합의가 미국의 승리가 아니라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재명 정부의 관리(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합의 이행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이란 핵 프로그램이다. 부통령 JD 댄스는 “이번 합의는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인터넷 매체 엑시오스가 보도한 합의 내용은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합의가 아니다. 앞으로 60일 동안 핵 문제를 논의할 절차를 정한다는 것이다.

그나마 예상되는 결과는 2015년 버락 오바마가 이란과 맺은 합의보다 미국에 불리할 전망이다. 당시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네타냐후는
협상 당사자에서
제외되는 수모를 겪었다.
이스라엘 영향력의
한계를 보여 준 것이다**



미국은 이란 전쟁 패배로 서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도를 15년간 3.67퍼센트로 제한하고(비무기용) 저농축 우라늄 보유량을 300킬로그램 이하로 묶었다. 트럼프는 첫 임기 때인 2018년에 이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이번 협상에서도 이란의 농축 우라늄 등 핵물질 처리 방식과 농축 중단 시한이 관건이다. 트럼프는 이 쟁점에 대한 답변을 회피해 왔다.

이스라엘도 패배한 것이다

이란과의 전쟁에서 트럼프만 패배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도 깊은 수렁에 빠졌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전쟁이 끝나는 것을 막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최근 레바논을 폭격한 것도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좌절시키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의 불안정은 절박감에 쫓기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뉴욕 타임스〉는 이렇게 논평했다. “아이러니하게도 협정을 위태롭게 했던 바로 그 조처, 즉 협정에 반대하는 인물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명령

한 베이루트 폭격이 협정 체결을 앞당겼고 이란에 더 유리하게 만들었다.”

네타냐후는 협상 당사자에서 제외되는 수모를 겪었다. 이스라엘이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한계를 보여 준 것이다.

JD 댄스는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때로는 우리의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일치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긋나기도 합니다. 제가 총리 [네타냐후]를 지켜본 바에 따르면, 그는 자국의 이익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는 때로는 우리가 뜻을 같이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향력은 지역 강국 수준이다. 그러나 이란이 이번에 새로 확보한 영향력은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이스라엘의 역내 군사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공군력에 의존하는 이스라엘의 공세를 견뎌 낼 수 있음을 입증했다. 미국 측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미사일 무기고를 파괴하는 데 실패했다. 반면 이란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아이언 돔을 뚫고 이스라엘을 타격했다.

이란은 지난 7일 이스라엘군의 레바

논 수도 베이루트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북부를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를 두고 미국의 외교 정책 싱크탱크 컨시 책임국가운영연구소 부소장 트리타 파르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제3국 영토 공격을 이유로 이스라엘을 타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전선이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 반드시 보복이 따를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란의 억제력은 이미 회복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제 이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도 대응할 것임을 입증했다. 지역 강국이 제3국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적 기동이나 침략에 맞서 하드 파워를 투입할 수 있는 수단·역량·의지를 보여 준 것은 수십 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중동 안정을 보장할 지역 강국으로 보고 수십 년 동안 후한 지원을 해 왔다. 이 때문에 1973년 이집트·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 이후 어떤 중동 국가도 이스라엘에 직접 도전하지 못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정착자 식민 국가이므로 영토 강탈을 포기하지 않는다. 또한 네타냐후는 이란 국기를 파괴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미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미국의 무기와 방공망에 의존한다.

헤즈블라 분쇄와 이란 정권 붕괴라는 이스라엘의 핵심 목표를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란 합의는 이스라엘의 굴욕적인 패배다.

물론 이스라엘은 어떻게든 미국과 이란의 협의를 파탄 내려 할 것이고 실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는 위기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서아시아의 세력 균형

서아시아 지역의 세력 균형은 근본적으로 재편됐다. 이란은 2월 28일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모습으로

▶ 3면으로 이어짐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터질 수밖에 없는 거품 위에 선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의 둘째 임기는 첫 임기보다도 더 큰 파국을 향하고 있다. 그가 이란과 (깨지기 쉬운) 평화 협정을 맺은 것은 패배를 자인한 셈이다.

이란 전쟁은 물가를 끌어올리고 트럼프의 지지율을 떨어뜨렸다. 이민세 판단속국(ICE)을 앞세운 이주민 탄압과 공포 정치는 미네아폴리스에서 저항에 부딪혀 이전 만큼 위세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금 미국 지배계급은 2021년 1월 6일 극우의 국회의사당 습격 직후 트럼프를 배척했던 것과 달리 별다른 반발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근본적인 이유는 주식 시장 활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기업주들이 이미 얻은 막대한 부를 더 불리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자신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는 걸프만에 평화가 왔다는 설익은 소식을 남발해 왔는데, 그 발표 시점은 모두 주가를 떠받치도록 정해졌다.

이번 주에도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스라엘이 또다시 평화 협정을 파토 내려 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러나 트럼프에게 이득을 안겨 주는 더 커다란 흐름이 있다.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미국 경제에서 부풀어 오르고 있는 거대한 금융 거품이다.

이것이 단순한 신기루는 아니다.

주요 빅테크 기업들(‘하이퍼스케일러’)들은 각종 AI 알고리즘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센터 등의 AI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데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있다.

고사양 반도체 제조업체인 엔비디아의 주가가 7대 테크 기업(‘매그니피센트7’)의 나머지 기업들(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테슬라)보다 더 높다는 사실은 오늘날 생산 자본의 변화를 잘 보여 준다.

그러나 19세기 중엽 영국의 철도 투



AI 거품이 미국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덕에 트럼프는 정치 위기를 그럭저럭 모면하고 있다

기 붐이나 1990년대 닷컴 호황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거품이다.

즉, AI는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이윤을 안겨 주지 못할 것이다. AI가 결과적으로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낳든 간에 말이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는 이렇게 말한다.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투자금의 10퍼센트를 회수하려면 해마다 2조~5조 달러어치의 추가 매출을 이뤄야 한다. 현재 연매출 1.5조 달러를 이루고 있는 기업들에게 이는 꽤 버거운 목표다. 또 다른 가능성은 데이터센터, 컴퓨터 칩 등에 대한 투자 계획이 실현되지 않는 것이다.”

스페이스X

현재 테크 기업 투자가 미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음을 감안하면, 후자는 십중팔구 경기 수축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난주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미국 주식시장 상장은 이런 거품의 최근 징후다.

머스크가 서류상 세계 최초의 조만장자가 되자, 품격 있는 언론이라는

BBC나 <파이낸셜 타임스>조차 호들갑스럽게 머스크를 추켜세웠다.

좌경 자유주의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이런 찬양에 일침을 놓았다. “그간 머스크의 부는 자기실현적 믿음에 기대어 왔다. 머스크가 천재라고 믿는 투자자들이 그가 지배하는 회사들의 주식을 사려고 몰려들면 그 결과로 기업 가치가 오르고, 이는 다시 머스크는 역시 천재라는 명성을 높였다.”

“이처럼 신규 투자자들을 계속 끌어들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고, 성공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규 투자자들을 계속 끌어들이는 기업들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가 있다. 바로 폰지 사기다. 머스크는 폰지 사기의 의인화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수석 시장 분석가 로버트 암스트롱도 스페이스X 상장에 관해 “서로 연관된 두 가지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다.

“하나는 이번 상장이 수수료 수입에 혈안이 된 금융업계의 대대적인 조작을 통해 이뤄졌다는 우려다. 다른 하나는 투기적인 동시에 놀랍도록 경쟁이 치열한 산업에서, 현금을 먹여치우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기만 하는 기업의 가치를 1.75조 달러로 평가한 것은 아무리 봐도 [비합리적이다. — 캘리니코스]

골드만삭스 등 이번 상장 과정을 관리한 은행들은 수수료로 5억 달러를 벌었다.

몇몇 증권거래소들, 대표적으로 나스닥은 스페이스X를 자신들의 주가지수에 포함시키려고 지수 산출 방식까지 바꿨다.

이것은 스페이스X의 주가를 더 끌어올릴 텐데, 블랙록 같은 대규모 자산 관리 업체들은 주가지수에 포함된 기업의 주식을 구입해야만 하기 때문이다.(‘수동적 투자자’)

신기술 기업이지만 그 수법은 낡은 것이다. 생전에 여러 주식시장 사기를 분석했던 마르크스가 지금 벌어지는 일을 본다면 하나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일론 머스크와 골드만삭스뿐 아니라 트럼프도 이 과정에서 득을 보고 있다.

AI 거품이 만들어낸 경제적 낙관 덕분에 트럼프는 가족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는 스캔들과 무엇보다 중동에서 겪은 정치적 낭패를 무사히 넘기고 있다.

뒤집어 말하면, 거품이 터지면 트럼프는 훨씬 더 취약해질 것이다.

출처 Alex Callinicos, 'Trump's riding a bubble that's set to burst' (2026. 6. 15) / 번역 김중환

▶ 2면에서 이어짐

지역 강대국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

최근 로이터통신은 서아시아의 변화된 세력 균형을 보여 주는 의미심장한 사례를 보도했다. 아랍에미리트가 자신을 향한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 중단을 조건으로 이란에 총 100억 달러(약 15조 2,000억 원) 규모의 자금

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으며, 이 가운데 30억 달러(약 4조 6,000억 원) 이상이 이미 전달됐다는 내용이다.

2월 28일 미국과의 전쟁에서 이란이 더 강력하게 부상할 것이라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으나 그렇게 됐다. 이란은 걸프 지역 국가들을 분열시켜 오만·카타르와 사실상 동맹을 맺었으며,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도 강화했다.

미국의 이란 전쟁 배경에는 중국 등과 벌이는 제국주의적 경쟁이 있다. 이 경쟁은 인도-태평양과 서반구뿐 아니라 서아시아에서도 전개된다. 서아시아의 화석 연료 생산과 수출 인프라는 아시아를 향해 재조정되는 추세다. 중국은 이란산 석유의 90퍼센트를

사들인다. 미국은 이란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서아시아의 석유·가스 공급망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서아시아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과시하려 시작한 이란 전쟁은 오히려 미국의 위기를 가속하고 있다.

김인식

이재명 ‘중도보수 확장’의 역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 2주가 지나고 있지만, 후폭풍이 잦아들기는커녕 더 커지고 있다.

역설이지만, 지금 더 큰 폭풍에 시달리는 쪽은 더 우세한 선거 결과를 얻은 정부·여당이다. 서울시장을 국민의힘(국힘)에 내주는 등 “승리라고 할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한 데 이어, 국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는 결과도 나오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 관리 부실에 대한 불만과 비판 여론도 역설이게도 정부·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선관위는 행정부와 형식적으로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국힘 장동혁 등 극우의 부정선거 음모론은 전혀 합리적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부정선거의 근거라며 장동혁이 들이댄 ‘동수 득표’는 지난 세 차례 지방선거 중 가장 적게 나왔다(〈오마이뉴스〉).

그럼에도 선거가 국가 행정 업무의 일부이고, 일상적으로 국가와 구분되기보다 행정부의 소관처럼 보여(실제로 지방직 공무원이 선거 업무에 투입됨) 정부에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의 수가 만만찮은 듯하다.

극우는 이런 비합리적인 인식을 이용해 주로 이재명 정부를 타깃으로 한 ‘부정선거 재선거’ 요구로 지지자들을 결속시키고 외연을 넓히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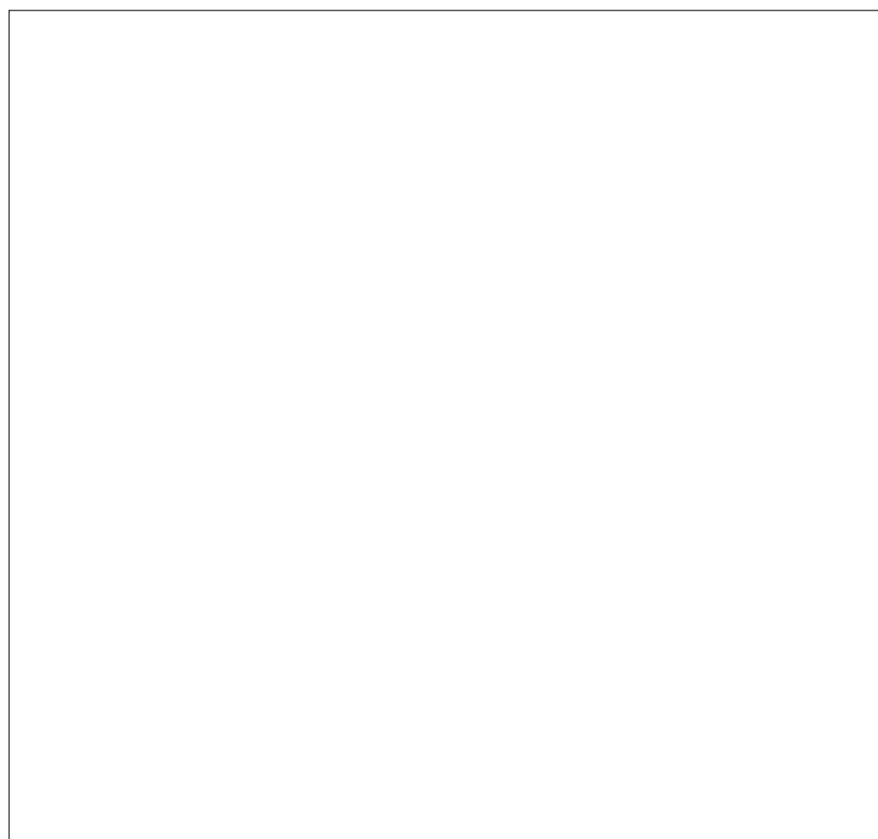
“정상화”

이재명 정부 1년 기조를 한 단어로 압축하면 “정상화”였다.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로 안정성이 크게 흔들린 정치 질서(국가 운영)를 다시 안정 궤도에 올려 놓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그 방법으로 제시한 ‘실용주의’는 사실상 기성 질서에 순응하는 것을 뜻했다.

이재명식 실용주의는 “원칙이 없는 정치라기보다 원칙을 ‘국익’, ‘성장’, ‘안정’, ‘통합’으로 이미 정해 놓고 그 목표 안에서 수단만 유연하게 바꾸는 정치”이며, 그 정부는 “민주주의를 민중의 자발적 활동으로 보기보다 정상적인 국가 운영 회복의 문제로 인식한다”(최일봉, 〈노동자 연대〉 586호).

6·3 지방선거는 그 기획의 첫 중간



극우는 법이나 선거로 제압할 수 없다. 6월 16일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에 참가한 장동혁

평가였다. 그리고 결과는 정상화가 공식 정치 영역에서조차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 줬다.

군사 쿠데타가 미수에 그치고 윤석열 탄핵과 구속, 대선을 거치며 정치적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내란 청산’은 대중적 원성이 자자한 극소수 쿠데타 주범들을 처벌하는 선에서 멈췄다. 게다가 대법원장 조희대 등 사법부 실권자들이 ‘삼권분립’을 내세워 쿠데타 숙정에 강력히 제동을 걸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 안정화를 우선시해 국가기구 곳곳에 포진한 쿠데타 동조자와 지지자들을 발본색원하거나 숙정하는 일을 피했다. 가담자들은 군사 쿠데타라는 전체 맥락에서 분리된 채 개인 수준에서의 불법 유무만 따져 징계하는 데 그쳤다.

‘중도보수 확장’을 내세워 이해훈 등 쿠데타를 공공연히 옹호한 자들을 내각에 임명하려 했고, 그 정도는 아니어도 사실상 쿠데타를 방조한 우파 인사들을 정부 부처 곳곳에 임명하거나 내버려 뒀다. 민주주의 자체를 언제든 내팽개칠 수 있는 자들이 국가기구 곳곳에 남았다.

더구나 쿠데타 주범들과 극우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국힘은 극우화했고 그 지도부는 견제하

다. 그들과 거리를 두는 척하는 자들은 그들과 함께 선거를 치렀고 살아남았다.

중도보수로의 확장이 극우를 고립시켜 결국 소멸하게 만들 것이라는 전략은 전혀 통하지 않았다.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

중도보수 확장은 극우를 고립시키지 못한다

그럼에도 이재명은 선거 패배의 책임을 여당 지도부에게 돌리며 중도보수로의 확장 노선을 더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히려 패인을 확장의 부족에서 찾는다. 네이버 CEO 출신 기술관료 한성숙을 국무총리로 임명한 것이 이를 잘 보여 준다.

‘명픽’ 행정관료 정원오, ‘뉴이재명’ 김용남, 기술관료 하정우, ‘진정한 보수’ 김부겸 등의 패인도 정청래 지도부의 ‘강경’ 기조 탓으로 돌리는 듯하다. 사실 정청래 지도부는 내란 청산과 사회 개혁에 대해서는 강경 기조를 선거를 치르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이번에 당선된 김남국도 심지어 선거 패인의 하나로 ‘내란 청산’ 구호를 폈었다. 김남국은 코인 투기와 이해충돌, 인사청탁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측근인 덕분에 공천을 받아 국회의

원이 된 자이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지난 1년 — 중도보수 확장 노선, 내란 청산 부실, 사회 개혁 실종에 대한 진보적 지지자들의 불신 — 이 선거 패인이라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정청래의 배후에 있는 친문 진영은 강성 민주당 지지자 결집을 얘기한다. 검찰 개혁의 쟁점인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를 다시 꺼내어 날을 세우는 것이 그 신호다. 그런데 그것이 어딜 봐서 진정한 개혁인가.

8월 17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는 차기 총선 공천권이 걸린 지도부 선거다. 그런 만큼 여당 내 갈등과 대립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노동계급의 처지에서 보면 친명이든 친청이든 이 다툼은 진보성 경쟁이 아니다. ‘중도 확장’이든 ‘강성 결집’이든 우파 제압에는 효과가 없다.

극우는 검찰 ‘개혁’ 저지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 개혁의 부작용이 드러나면 역공하려고 기회를 노리는 듯하다.

극우는 선관위의 어처구니없는 직무유기를 발미로 재선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선거 내내 사퇴 요구에 시달렸던 장동혁은 이 분위기에 편승해 숨통을 틔우고, ‘원조 친윤’ 정점식을 새 원내대표로 맞이하며 한숨을 돌렸다.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을 앞서는 등 불리한 처지가 아니다.

기류가 바뀌자 선거법 때문에 재선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던 나경원은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올림픽공원의 ‘재선거’ 시위에 가세했다. 국힘 지도부는 15일 재선거 소청을 결정했다.

한때 서울시장 자리만 지켜도 선방이라고 여기던 국힘은 선거 관리 전체를 문제삼으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명분 삼았던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마저 옹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한다.

다급한 이재명 정부는 올림픽공원 농성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극우는 헌법 등 법률로 없애지 못한다. 여러 역사적 사례가 입증하고, 이론적 분석도 마찬가지로 결론에 이른다. 극우는 대중(특히 노동계급 대중)의 힘, 실력으로만 짜그러뜨릴 수 있다.

장호중

‘영업이익 N퍼센트 성과급’ 요구 제약하려는 정부 ‘영업이익’은 노동자가 만든 가치의 일부다

정부가 기업의 ‘영업이익 N퍼센트 성과급’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노사가 영업이익의 약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성과급 지급에 합의했다. 이후 현대자동차·기아, HD현대중공업, 카카오, LG 유플러스 등 다른 대기업 노조도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을 요구하자 정부가 이를 차단하려고 나선 것이다.

최근에는 하청 노동자의 성과급 배분 요구도 나오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SK하이닉스에 반도체와 부품을 운반하는 하청 기업 피앤에스로지스 노동조합은 원청을 상대로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주들은 노란봉투법 시행과 맞물려 향후 하청·협력업체 노동자 사이에서도 성과급 배분 요구가 확산될 것을 우려한다.

주총을 통해 성과급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흔히 ‘주주의 권한’을 든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은 6월 8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업 초과이익 배분 논란과 관련해 “노동자의 기여도 있고 회사 투자자의 몫도 있다”고 말했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은 각종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한 주주의 것이라는 의미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이익은 불확실한 투자 리스크를 감수한 자본의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무계획적인 시장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에서 파산이라는 ‘리스크’는 필연적으로 생겨난다.

이 리스크는 자본가만 지는 것도 아니다. 자본가는 사업에 실패해도 자본을 날리는 피해를 입는 데 그치지 않고, 노동자는 기업이 파산하면 해고돼 당장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다.

요컨대 리스크를 진다는 것만으로는 기업 이익(또는 기업의 부가가치)을 설명하지 못하고, 그것이 자본가의 이익 획득을 정당화시켜 주는 것도 아니다.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기업 이익은 노동자가 생산한 부가가치 중 일부가 임금으로 지급되고 남은 가치(잉여가치)를 점유한 결과다. 기업 회계에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으로 표현되더라도 이것이 모두 기업 이익



SK하이닉스에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는 하청 기업 피앤에스로지스 노동자들

은 아니다. 이 지표들은 노동자들이 생산한 전체 부가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 세금이나 추가 비용(예컨대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등을 제외한 것만 기업 이익으로 남는다. 따라서 성과급 인상 요구는 노동자가 창출한 가치 중 임금 몫을 확대하라는 요구다.

또, 애초에 자본주의 주식회사 제도 자체가 주주의 권리를 제한한다. 예컨대 어떤 회사의 주식 30퍼센트를 소유했다 해도 회사 자산의 30퍼센트를 마음대로 운영하거나 처분할 권한은 없다. 주주는 기업 자체가 아니라 주식을 소유하며, 이를 통해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을 뿐 임금 결정 등에 개입할 권한은 제한된다. 그래서 ‘주주 자본주의’가 발달한 미국에서도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순이익의 10~25퍼센트를 노동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성과급 요구 회피

한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성과급도 노사 협상 대상”이라며 성과급을 제한하려는 정부를 비판했다. “대주주의 입김이 절대적인 주총에 결정을 맡기는 것은 노동자를 분배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교섭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것이다.

그러나 양경수 위원장은 성과급 인상 투쟁에 대한 지지는 일절 얘기하

지 않았다. 7월 15일로 계획된 민주노총 파업에서도 성과급 인상은 “요구로 담을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대신 “원·하청 노동조합이 연대해 하청 노동자에게 돌아갈 몫을 보장하는 실질

적 상생 방안을 교섭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를 강조한다.

하지만 사회적 대화가 하청·비정규직 등 저임금 노동자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양경수 위원장도 지적했듯이 “노란봉투법이 개정됐음에도 정부부터 모범 사용자로서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 또, 최근 최저임금위원회는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부결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이 한국 경제의 경쟁력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인한 초과 세수를 “잠재성장률 회복에 장기 투자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며 기업 지원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다.

성과급 인상을 포함한 임금 인상 투쟁이 산업 전반에서, 그리고 원하청 노동자 투쟁으로 확산돼야만 노동자들이 생계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강동훈

공개 토론회

관심 있는 주제, 가까운 지역을 찾아 보세요
더 많은 공개 토론회 상세 정보

서울 서부

성과급 투쟁과 이익공유-사회연대임금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 마르크스주의의 관점

일시 6월 17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서울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PLATFORM P 2층 다목적실 (홍대입구역 4번, 7번 출구 도보 5분)
발제 김문성 <노동자 연대> 기자 ※ 전문통역사의 영어 통시통역 제공
참가비 4,000원 (학생·난민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 서울 서부 지역 모임들 문의 010-8074-2793 / s-west@ws.or.kr

서울 동부

성과급 투쟁과 이익공유-사회연대임금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 마르크스주의의 관점

일시 6월 18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서울 바인그룹빌딩 10층 1004호 (신설동역 3번 출구에서 도보 1분)
발제 김문성 <노동자 연대> 기자 ※ 전문통역사의 영어 통시통역 제공
참가비 5,000원 (학생·난민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 서울 동부 지역 모임들 문의 010-5731-7299 / s-east@ws.or.kr

부산/울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파장과 극우의 준동, 어떻게 볼 것인가?

일시 6월 20일(토) 오후 3시 **장소** 부산 하이텐 스타디움 3층 a-sm강의실 (서면역 1번 출구 도보 5분)
발제 이재혁 <노동자 연대> 기자
참가비 5,000원 (학생·난민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 부산/울산 지역 모임들 문의 010-8028-8029 / busan-ulsan@ws.or.kr

인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파장과 극우의 준동, 어떻게 볼 것인가?

일시 6월 24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인천 한국열린평생교육원 5층 강의실 (부평역 1번 출구 앞 50미터)
발제 김문성 <친위 쿠데타, 극우 정치, 민주주의> 공저자, <노동자 연대> 기자
참가비 5,000원 (학생·난민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 인천 지역 모임 문의 010-6224-2157 / incheon@ws.or.kr

임금이란 무엇인가? 오늘의 문제들: 마르크스의 관점

김하영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성과급 투쟁은 임금 문제를 우리 사회의 핵심 화두로 올려놓았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치고 나가자, 통계 수치로만 떠돌던 생계 문제가 살아 움직이는 쟁점이 돼 다른 노동자들도 들썩이게 만들고 있다.

사실 지난 수년 동안 노동자들은 임금 하락을 감내해 왔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실질임금이 하락(-0.98퍼센트)했음을 보여 주었다.(<윤석열 정부 3년: 생산성 정체, 실질임금 하락>)

지난해 한국은행도 전체 국민소득 중 노동자 몫이 3년 만에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피용자보수비율이 감소한 것인데, 이는 소득분배 악화를 뜻한다. OECD 통계를 봐도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54퍼센트 정도로 OECD 평균(60~65퍼센트)보다 크게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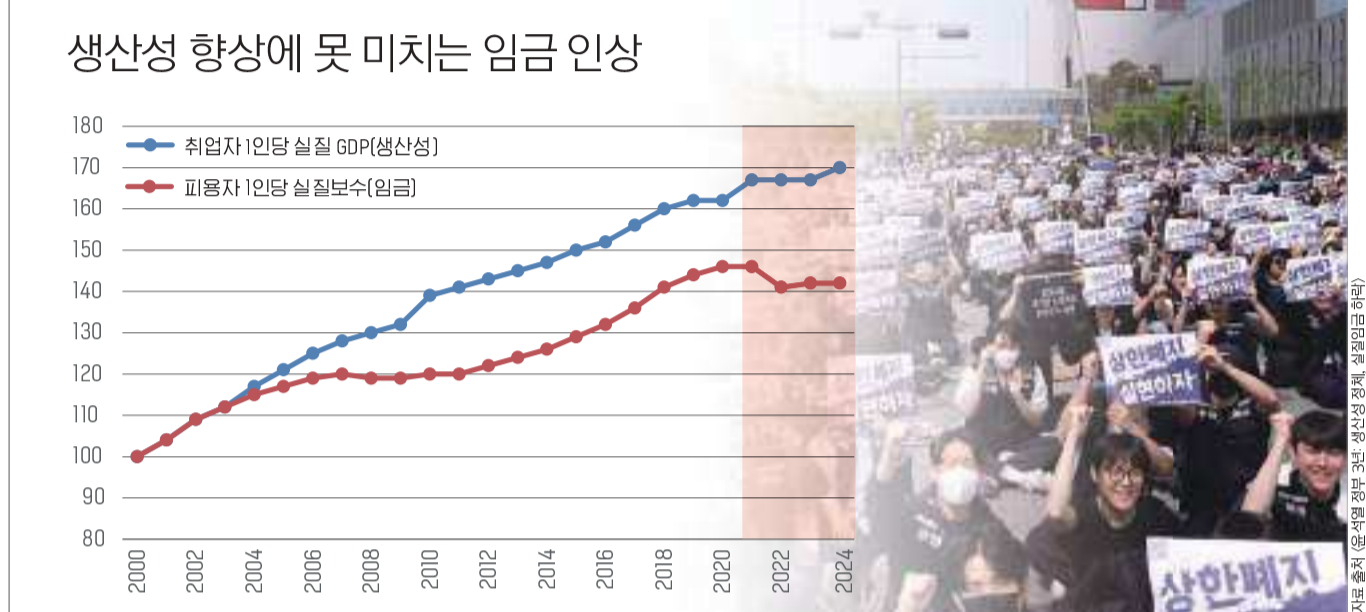
윤석열 정부를 끝장내면서 노동자들이 염원한 변화 중에는 분명 생계 문제 개선이 포함됐을 것이다. 그러나

임금과 착취

기업 이윤이 노동자의 노동이 아니라 투자된 자본이나 외부 요인으로 창출된다는 주장은 착취를 은폐하는 거짓말이다. 자본가는 생산수단을 그저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이윤을 얻지 못한다. 노동자를 고용해 생산수단을 가동해야만 이윤을 얻을 수 있다.

고용된 노동자는 자본가의 통제를 받으며 상품을 생산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 자본가와 노동자는 노동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들을 따라 '은밀한 생산 장소'로 들어가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마르크스는 지적한다.

마르크스는 자본가가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노동자가 노동으로 창출한 가치는 임금보다 훨씬 크다. 임금은 노동력의



노동자가 만든 부가가치는 계속 늘어났지만, 실질임금은 오히려 삭감됐다

지난 1년여 동안 그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노동자 실질임금은 더 하락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발표를 보면, 2026년 1월 실질임금은 전년 대비 9.4퍼센트나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임금을 올리고 생활 수준을 개선하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삼성전자 노동자들도 코로나19를 경과하며 억제됐던 보상을 받아내고자 했다.

그러나 첨단기술 산업 분야의 노동

자들이 높은 성과급을 쟁취하자 맹비난이 쏟아졌다. 경총, 주주, 친기업 언론, 정부는 때로 달려들어 이 노동자들이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성과를 부당하게 독식한 것처럼 몰아갔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 배를 불리는 것처럼 이간질하기도 했다.

그런 와중에 민주노총 지도부가 목소리를 보탠 것은 씬쓸하다. “초과이윤은 자본과 일부 대기업 노동자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며 삼성노조에 “연

대의 성숙함을 보이라”고 훈계하기까지 했다. 투쟁 속에서 연대를 받아 본 노동자들이 연대의 중요성을 깨닫는 법인데, 민주노총은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이 집중포화를 받는 동안 지지와 연대를 보낸 적이 없었다.

좌파 대부분도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성과급 투쟁을 방어하지 않고 외면하고 회피했다. 이것은 그들이 계급정치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여준다.

재생산 비용일 뿐이다. 노동자는 하루 노동시간 중 일부만 일해도 이 비용을 충당할 가치를 생산한다. 그러나 자본가는 노동자가 임금 가치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시간보다 더 오래 일하도록 강제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가 임금 이상으로 추가 생산한 잉여가치는 자본가의 몫이 된다. 이것이 바로 이윤의 원천이며, 요컨대 이윤은 노동 착취의 결과물이다.

임금과 이윤은 반비례한다. 마르크스는 《임금, 가격, 이윤》에서 “노동자가 창출한 가치는 노동자와 자본가가 각각 자신의 몫을 끌어내야 할 유일한 원천”이라며 “한쪽이 더 많이 받으면 그만큼 다른 쪽은 적게 받게 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임금노동과 자본》을 통해 “자본의 몫인 이윤은 노동의 몫인 임금이

하락하는 것과 같은 비율로 상승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며 “이윤은 임금이 하락하는 만큼 상승하고, 임금이 상승하는 만큼 하락한다”라고 강조했다.

마르크스가 ‘공정한 거래’라는 외관 뒤에서 무보수 노동 수취, 즉 착취가 벌어지고 있음을 밝혀낸 것은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착취는 흔히 생각하듯 악덕 기업주의 예외적인 악행이 아니라, 자본과 임금노동 관계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자본주의는 ‘자유로운’ 임금노동을 착취하는 데 기반하며, 자본 간 경쟁은 착취를 극대화하도록 추동한다. 자본가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동자를 더 오래, 더 열심히, 더 적은 노무비로 일하게 만들고, 기술혁신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결국 자본가는 개인의 성과와 관계없

이 냉혹한 착취자로서 노동자를 마주할 수밖에 없다.

이런 착취적 생산관계 때문에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해관계는 근본적으로 대립하며, 그 충돌로 끊임없이 투쟁한다. 계급투쟁은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이다. 이는 사회학자들이 사회를 본질적으로 조화롭다고 보거나, 아니면 갈등을 조정해 계급 화합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관점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충돌의 근본 원인은 착취적 생산관계에 있다. 즉,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의 노동에서 나오는 잉여 생산물(이윤)을 체계적으로 수취하기 때문이다. 이 충돌은 임금과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을 둘러싸고 벌어지며, 복지, 교육, 법질서, 외교 등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된다.

자료 출처: 윤석열 정부 3년: 생산성 정체, 실질임금 하락



사진 출처: 삼성전자

고임금 노동자는 대부분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더 많이 착취당하고 있다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

마르크스의 착취 이론은 특정 노동자 집단이 얼마나 빈곤한지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노동자가 얼마나 착취당하는지는 임금이나 생활 수준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착취 정도는 노동자가 받는 임금에 비해 얼마나 많은 잉여가치를 생산하는지에 달렸다.

고임금 노동자라고 해서 착취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덜 착취당하는 것도 아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고임금 노동자가 저임금 노동자보다 임금 대비 잉여 가치 비율이 높다면 그가 더 많이 착취당하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과 훈련 수준이 높은 고임금 노동자가 생산성이 더 높고 착취율도 더 높을 수 있다.

안타깝게도 노동운동과 좌파 측에서는 착취를 저임금 노동자만의 문제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고임금 노동자는 독점과 원·하청 불공정 거래에서 비롯된 ‘초과이윤’을 누린다고 본다. 초과이윤을 얻은 기업이 노동자에게 고임금을 주어 이들을 매수했고, 이에 따라 노동자가 특권화돼 보수화됐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삼성전자 노동자들에게 “우월적 지위를 내려놓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독점이 경쟁을 대체하고, 독점기업이 초과이윤을 고용 노동자와 나눈다는 주장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첨단산업 대기업조차 치열한 경쟁에서 자유롭지 않다.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업은 고용 노동자에게서 잉여가치를 최대한 많이 뽑아내야만 한다.

삼성전자가 성과주의 임금제를 고집하

는 이유도 착취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성과급제 아래에서 사용자는 임금이 노동자의 업무 수행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노동자 개개인이 스스로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도록 유도한다. 그 결과 성과급은 노동강도 강화, 노동시간 연장, 임금 인하를 위한 지렛대로 작용한다.

따라서 고임금 노동자의 성과급 투쟁 역시 자신의 무보수 노동을 덜 빼앗기려는 정당한 투쟁이다. 이들 또한 착취당한다는 점에서 노동계급의 다른 집단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물론 착취가 모두에게 균등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성별, 성적 지향, 인종,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은 착취를 강화한다. 차별로 인해 취약한 처지에 놓인 노동자는 더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내몰리기 쉽다. 자본주의 옹호자들은 개인의 능력과 노동 시장 내 위치에 따라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는다라는 논리다. 그러나 실제로는 능력과 무관하게 단지 여성이나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더 낮은 임금을 받는다.

또한 차별은 특정 노동자 집단만 취약하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노동계급 전체를 약화시킨다. 노동자를 분열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별과 계급을 대립 구도로 바라보는 것은 오류다. 노동계급은 성별, 성적 지향, 인종에 따라 노동자를 분열시켜 착취를 강화하려는 지배계급에 맞서 차별 반대에 동참하는 것이 유리하다.

임금 격차의 확대/해소 역학

착취당하는 처지라고 해서 연대와 단결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착취는 은폐돼 있는데다, 노동시장은 노동자를 서열화하고 분절해 경쟁시키며, 자본가 계급은 노동자를 이간질해 분열시키는 전략을 쓰기 때문이다.

노동계급 내부의 임금 격차에도 이러한 요인이 작용한다. 임금 격차는 부분적으로 개별 노동자의 가치 생산 능력 차이에서 비롯하지만, 관습과 관행, 그리고 자본가의 노동자 분열 전략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노동력은 일반 상품과 달라서, 자본가가 이를 구매했을 때 마주하는 대상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간이다. 따라서 노동자는 자본가가 책정하는 가격을 아무런 의문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르크스는 노동력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이 최저 생계 수준만이 아니라며 “역사적·사회적 요소”를 강조했다. “[노동력 가치] 이런 육체적 요소 외에도 각 나라의 전통적 생활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이 수준에는 단순한 육체적 생활 욕구 충족뿐 아니라, 사람들이 생존하고 양육되는 사회적 조건으로 발생하는 욕구 충족도 포함된다. ... 이 역사적·사회적 요소는 확대되거나 축소될 수 있고, 나아가 육체적 한계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

히 소멸할 수도 있다.”

이런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노동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해 투쟁하며, 이 투쟁의 누적 효과는 노동력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임금 수준은 결국 투쟁 당사자(자본과 노동)의 상대적 힘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마르크스는 주장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수년 동안 임금을 대폭 올린 한국 노동자들은 임금 수준이 투쟁에 달려 있음을 보여 준 증인이다. 투쟁 과정에서 생산직과 사무직, 숙련과 미숙련의 임금 격차도 축소됐다.

팔레스타인 출신의 영국 사회주의자 고(故) 토니 클리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는 방식은 꽤 단순하다고 지적했다. 강력한 산업과 숙련 부문의 잘 조직된 노동자가 강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임금 인상을 쟁취한다. 그러면 노동계급의 나머지 부문은 이들과 임금 수준을 비교하며 이를 따라잡고자 애쓴다.

물론 특정 노동자 부문이 임금 인상을 쟁취하면 나머지 노동자 부문과의 격차가 일시적으로 더 벌어질 수 있다. 그러나 추세로 보면 노동자 임금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격차를 좁힌다. 선도적인 투쟁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를 고무해 투쟁에 나선 자신감을 주기 때문이다.

▶ 8면으로 이어짐



노동자 투쟁은 전반적인 임금 상승을 이루고, 임금 격차를 줄일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 준다

▶ 7면에서 이어짐

임금 투쟁과 의식 변화

그러나 노동운동에서도 개혁주의가 강화되고 계급정치 대신 특권이론 등이 득세하면서, 노동자 투쟁이 해당 부문에만 득이 되고 격차만 늘릴 뿐이라는 주장이 확산됐다. 이에 따라 적정 임금 수준과 격차 해소를 보장하는 제도 마련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그 중 하나인 스웨덴 연대임금제의 문제점은 뒤에서 살펴본다.)

마르크스는 일찌감치 이런 견해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파업을 ‘노동자 자신’의 이익에 유해한 것으로 보면서, 자신들의 위대한 목적이 영구적 평균 임금을 확보하는 방법을 발견하는 것에 있다고 보는 일단의 박애주의자와

심지어 일단의 사회주의자가 있다.” 그러나 “다양한 국면들로 이루어지는 산업순환의 현실을 감안할 때, 그와 같은 평균임금 개념은 말도 안 된다.”

노동력이 상품으로 거래되는 임금제도 아래서는 생산비가 서로 다른 노동력에 대해 노동시장에서 서로 다른 가격을 매긴다.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임금 평등을 요구하는 것은 허망한 소망이자 천박한 급진주의의 산물이라고 마르크스는 지적했다. “임금제도의 토대 위에서 평등한 보수 또는 적어도 공정한 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노예제도의 토대 위에서 자유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마르크스가 더 나은 임금을 위한 투쟁을 경시한 것은 결코 아니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주장했다.

“정반대로 나는 임금의 상승과 하락의 교대, 그리고 그로 인한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지속적 갈등은, 산업의 현재 조직에서 노동계급의 정신을 지탱하고, 노동자를 지배계급의 침탈에 대항하는 하나의 거대한 연합으로 단결시키며, 노동자가 무감각하고 아무 생각 없는 잘 먹인 생산도구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라고 확신한다. ... 우리는 그(파업과 결사) 경제적 결과가 겉보기에 하찮다고 해서 눈감아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도 도

덕적·정치적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마르크스가 당대 좌파들과 달리 임금 투쟁을 중시한 이유는, 노동자가 그런 불가피한 ‘유격전’ 속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의식과 조직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이 임금 투쟁은 처지를 일시적으로 개선할 뿐이라며 포기한다면 “구제할 도리 없는 패잔병의 무리로 타락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노동자가 자본과의 일상 투쟁에서 비굴하게 굴복한다면 그 어떤 더 광범한 운동을 일으킬 자격도 잃고 말 것이다.”

연대임금제 문제: 결론을 대신해

노동운동 안에서는 연대임금제가 격차 해소 방안으로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특히 노동조합의 고위 상근간부층은 그 수단으로 중앙 및 산별교섭을 중시하는 스웨덴 모델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최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임금 격차 해소 방안으로 꺼내 놓은 것이 바로 스웨덴 연대임금제다. 그는 철도노조와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냈다.

스웨덴 연대임금제는 개별 기업의 지불 능력과 관계없이 노동자 임금을 균등화하는 정책으로 알려져 있다. 연대임금제가 시행된 것은 고용주연합(SAF)과의 중앙교섭이 이뤄진 1952년 이후였으나, 스웨덴 노총은 그전부터 준비를 갖췄다.

핵심 내용은 내수 부문(특히 건설 노동자)의 고임금을 억제하고 수출 부문의 저임금층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스웨덴 노총은 1951년 총회에서 고임금층 임금 인상 자제를 위한 조정자 역할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연대임금 모델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임금 억제와 산업 평화가 강요되면서 기업은 막대한 이윤을 축적하며 거대해졌으나, 노동자의 불만은 커져이 쌓였다.

연대임금제는 격차를 줄이는 균등화를 표방했으나 결국 전반적인 임금 억제 효과를 냈다. 스웨덴 연대임금



4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 중앙 교섭을 중시하는 '연대임금제'는 임금 억제와 산업 평화 강요로 노동자 수동화의 위험을 키운다

전문가인 신정완 교수는 “노동과 자본 간 기능적 소득분배 측면에서는 노동층의 임금소득 증가를 억제하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라고 지적한다.

스웨덴 노총은 연대임금제를 추진하면서 산하 노조의 임금 쟁의를 통제했다. 가령 고임금층인 건설 노동자의 파업은 임금 격차를 심화시키는 해로운 행위로 규정돼 규제 대상이 됐다. 이와 같은 노동조합 기구의 통제 강화는 현장 노동자의 수동화를 낳았다.

격차 해소 방안 중 급진적 형태라 할

수 있는 스웨덴 연대임금제가 임금 억제와 노동자 수동화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동운동 내부에는 기층 노동자의 투쟁이 기껏해야 협소한 부문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이므로, 노조 상층기구나 개혁주의 정당을 통해 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 더는 노동자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기 어렵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처지가 낮고 잘 조직된 노동자의 투쟁을 이기적인 행

위로 규정해 자제를 요구하는 것은 격차 해소와 연대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전체 노동자의 투쟁력 훼손과 수동화 위험만 키운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진행 중이다.

이와 반대로 상대적으로 처지가 낮고 잘 조직된 노동자의 힘이 사업장과 부문을 넘어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연대와 단결은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 계급정치를 바탕으로 노동운동 내부에서 연대와 단결을 설득하는 활동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남미 곳곳에서 극우 전진 중, 그러나 저항도 있다

라틴아메리카 곳곳에서 극우가 전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올해 1월 베네수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부부를 납치한 일은 중남미 우익들에게 좌파 민족주의·개혁주의 정부에 맞서 투쟁하라는 전진 나팔이 됐다.

브라질에서는 극우의 재기에 속도가 붙었다. 브라질 극우는 미국 극우 마가(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연계가 깊고 극우 보수소나루 정부(2019~2023)에 힘입어 한때 중남미에서 가장 위협적이었지만, 2023년 보수소나루의 쿠데타 기도 실패로 기세가 주춤하고 있었다.

그러나 브라질 지방정부들에 따리를 탄 극우들은 트럼프의 '마약과의 전쟁' 프로파간다를 차용해 권위주의적 공격을 강화했고, 브라질 기독교 우익은 대규모 집회를 열며 세를 과시했다.

노동자당(PT) 대통령 룰라는 그간 상이한 압력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 왔다. 룰라는 트럼프의 관세 압박과 간섭에는 저항하면서도 마두로 납치와 쿠바 봉쇄에는 맞서지 않았다. 의회에서는 우익 정당들과 협력해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노동운동·사회운동은 계속 동원 해제 상태에 묶여 왔다.

그러면서 룰라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지난달 브라질 우익 정당들은 보수소나루 감형과 복권을 가능케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다가오는 10월 대선에 출마할 보수소나루 후계자의 보수소나루 복권 주장에 힘을 실어 줄 것이다.

페루에서는 중도좌파 정부의 실패 이후 기성 우익이 득세하고 있다. 6월 7일 페루 대선 결선 투표 결과 친미 우익 게이코 후지모리의 당선이 유력시된다(부정선거 논란과 개표 지연으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전통적 우익 정당 국민연합의 대표인 후지모리는 독재자인 알베르토 후지모리의 딸이고, 2021년 대선에서 중도좌파 페드로 카스티요에 밀려 낙선한 강경 신자유주의자다.

이번 대선은 카스티요가 탄핵된 후 치러진 첫 선거다. 카스티요는 빈

곤·양극화 해소를 공약하며 2021년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취임 후에는 페루 자본주의의 안정을 위해 우파를 내각 요직에 앉히고 노동자들의 생활고 항의 파업·시위를 무력 진압했다. 실망한 대중이 카스티요 지지를 거두자 카스티요는 우익 정당들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축출당했다.

지난해 물가 급등에 항의해 페루 수도 리마에서 소요가 분출했지만, 오랫동안 사기가 저하되고 동원 해제돼 있던 노동운동과 좌파는 이를 국면 전환의 기회로 삼지 못했다. 권한대행 체제는 소요를 유혈 진압했다.

이는 이번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 중도좌파 후보 로베르토 산체스는 대선 1차 투표에서 2위를 했는데, 3위를 한 극우 라파엘 알리아가와 득표율 차가 0.12퍼센트에 불과했다.

후지모리 당선이 확정되면 안데스산맥 서쪽 국가들 모두 우익이 정부를 운영하게 되고, 이는 중남미의 다른 우익들도 고무할 것이다. 또, 후지모리의 친기업·권위주의 정책은 페루 노동자 서민을 더한층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콜롬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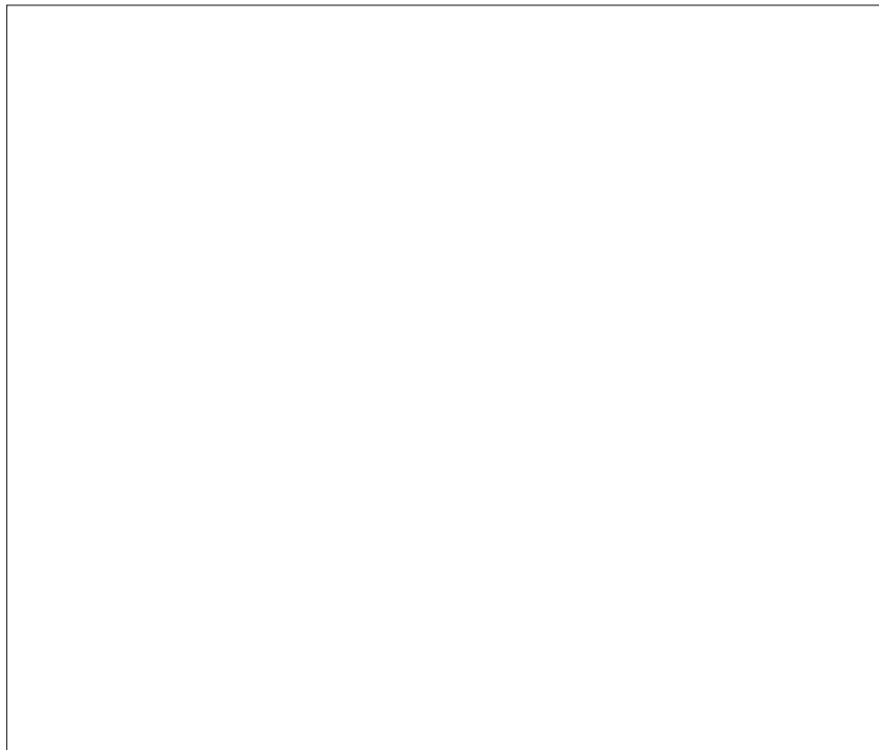
더 중요한 것은 콜롬비아 상황이다. 이곳에서는 극우가 중도좌파와 권위주의적 기성 우익을 모두 제치고 부상하고 있다.

6월 21일 결선 투표를 앞둔 콜롬비아 대선에서 극우 후보 아델라르도 에스프레야가 중도좌파 성향의 여권 후보 이반 세페다를 오차범위 이상으로 앞서고 있다.

트럼프와 마가의 지원이 일정 구실을 했다. 트럼프는 현 대통령 구스타포 페드로를 마약 카르텔 연루자로 매도하며 에스프레야에 "전적인 지지"를 선언했고, 마가는 세페다 등이 마약 카르텔과 연루돼 있다는 가짜 뉴스를 쏟아냈다.

페드로는 2021년 빈곤과 경찰 폭력에 항의해 분출한 대규모 파업·시위의 수혜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페드로는 사회 개혁을 약속하고 트럼프의 간섭을 규탄하며 명성을 쌓았다.

페드로는 최저임금을 국제노동기구



중도좌파의 실패 이후 중남미 각국에서 극우가 전진하고 있다. 브라질 보수소나루의 후계자

(ILO) 기준에 맞춰 23.7퍼센트 인상하는 등 몇몇 사회 개혁을 단행했다. 그러나 그 개혁들은 부유층을 아우르는 "국민 통합" 기초를 거스르지 않는 한도 내로 제한됐다. 그러한 개혁들은 실업률이 60퍼센트에 육박하는 콜롬비아 사회의 심각한 위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다.

페드로는 '마약과의 전쟁'에 반대하며 전임 정부의 '역사적 평화'(카르텔과의 휴전) 협정을 계승했지만, 카르텔 전횡의 근저에 있는 농촌 빈곤에는 거의 도전하지 않았다. '평화'는 없었고 빈곤과 폭력이 심화했다.

에스프레야는 트럼프의 '마약과의 전쟁' 물이에 편승해 카르텔 엄단을 공약했고, 페드로 정부뿐 아니라 '역사적 평화' 협정을 처음 맺은 기성 권위주의 우익 정당도 공격하며 부상했다.

반면, 페드로 당선을 가능케 했던 콜롬비아의 대중 운동은 정부의 "국민 통합" 기초에 협조하기 위해 동원 해제된 채 극우에 맞선 투쟁을 벌이지 못했다.

다가오는 결선 투표에서 에스프레야가 승리하면 주요 카리브해 연안국 모두에 미국에 협조적인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 이는 트럼프가 붕괴 직전의 쿠바를 더 압박할 수 있는 순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가 부추기는 중남미 우익 광풍에 맞서 라틴아메리카 곳곳에서 노동자 대중 저항이 벌어져야 한다.

이미 투쟁이 벌어지는 곳도 있다. 현재 중남미 극우의 기수를 자처하는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정부는 노동자들의 거둬드는 임금 파업과 저항에 지지율 위기를 겪고 있다.

칠레에서는 극우 대통령 안토니오 카스트가 취임한 지 반 년도 안 돼 학생 저항이 다시 시작됐다. 칠레 학생들은 카스트의 복지 삭감과 교육 개악에 항의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저항은 볼리비아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사회주의운동당(MAS)에 귀멸에 가까운 참패를 안기며 집권한 우익 정부는 수도 라파스를 한 달째 포위하고 있는 대중 파업에 직면해 취임 반 년 만에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

볼리비아의 대중 파업이 승리한다면 우익(극우 포함) 정부들에 맞선 라틴아메리카 노동계급 투쟁을 크게 고무할 것이다. 그런 저항에는 트럼프의 제국주의적·극우적 프로젝트에 차질을 줄 잠재력이 있다.

김준효



이 기사를 읽고 웹사이트에서 '볼리비아: 대중 파업이 우익 정부를 뒤흔들고 있다'도 함께 보시오.

‘36주 낙태’ 사건 항소심 — 여성에게 살인죄 적용한 원심은 파기돼야

전주현

이른바 ‘36주 낙태’ 사건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살인죄로 기소된 여성 권 씨(26세)는 1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병원장과 집도이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항소했다.

지난 5월 12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권 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의료진 측도 “산모의 자기결정권”에 의한 사건임을 고려하면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6월 23일 열리는 2차 공판에서는 임신중지권 운동을 하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후기 임신중지의 의료 현실 등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태아가 태내에서 사산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된 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특정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다만, 1심 판결은 낙태를 모두 범죄로 판단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낙태 허용 여부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결론은 그 자체가 신념으로서 존중 받아야 하므로, 이 판결이 이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 둔다.” 또, 임신중지권 공백 상태와 권 씨의 열악한 처지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살인과 같은 형사 범죄가 아니라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의 문제이므로 1심 판결은 부당하다. 병원에 가서 임신중지 수술을 받은 여성 당사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고, 이는 앞으로 여성의 임신중지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1심 재판부는 권 씨가 “어떤 방법으로도든 피해자(출생아)를 사망케 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권 씨가 병원에서 태아 사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판결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권 씨는 의사에게 직접 태아 사산 방법을 묻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것으로 살인죄가



임신중지권이 확립되지 않으면서 여성들이 살인 범죄 가해자로 몰리고 있다

인정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권 씨는 “의사가 적법한 방법을 통해 낙태를 시행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진술했다.

권 씨는 국가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었고, 해당 병원의 의료진에게 의지한 채 “지옥 같은 시간”(권 씨의 표현)을 견디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거의 없었다.

권 씨는 내과 병원에 갔다가 뒤늦게야 임신 후기임을 알게 됐다. 25살의 여성이 하루아침에 임신 36주 산모가 됐으니 눈 앞이 캄캄했을 것이다. 권 씨는 즉시 임신중지를 결정했다. 당시 권 씨는 실직 상태였고 가족과 연락도 단절된 채 홀로 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과 양육은 너무나 큰 부담이었다.

그러나 여러 병원에서 임신 후기를 이유로 수술을 거절당했다. 당시 교제 하던 남성이 수술 가능한 병원을 겨우 찾아 냈고, 권 씨는 해당 병원에서 짧게 상담을 하고 당일 바로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다. 소득이 없던 권 씨는 수술비 900만 원을 교제 하던 남성의 지원을 받아 겨우 마련했다.

임신 사실을 확인한 뒤 수술에 이르기까지는 불과 나흘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만큼 권 씨의 상황은 촉박했고

절박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을 임신중지 권리의 문제로 본다면 태아 사산 여부로 유무죄를 가릴 수 없다.

애초 출산이 아니라 임신 중지를 선택한 이상, 태아를 자궁 안에서 심장이 멎게 한 뒤 ‘배출’되도록 할 것인지, 자궁에서 빠져나온 뒤 심장이 멎도록 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오로지 산모의 안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 누구도 그 과정을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신중지 방법에 있어서 산모의 선택보다 의료진의 판단이 우선될 개연성도 크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임신중지권이 공백인 현실을 외면한 채 임신중지의 시기, 방법, 과정을 여성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전제하고는 그에 따른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임신중지 권리에 미칠 나쁜 효과

법원의 살인죄 유죄 판결은 여성의 임신중지권에 나쁜 효과를 미칠 것이다.

당장 후기 임신중지를 시행했던 병원들이 더욱 위축될 것이다. 현재 임신중지 권리에 대한 법제도적 공백 탓에 적합한 의료 가이드도 없고 의료보험도 안 된다. 이번 판결은 후기 임신중지 수술에 대한 의료진과 병원의 부담을 키울 것이고, 병원이 거절하면 여성들은 속수무책이다.

게다가 고주수·고위험 산모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시설과 숙련된 의료진이 갖춰진 전문 병원은 매우 적은 실정이다.

또한, “낙태는 살인”이라는 우파의 낙인이 강화될 수 있고, 그러면 여성의 정신적 부담과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 이것은 단지 후기 임신중지 권리에 대한 문제만도 아니다. 우파는 후기 임신중지에 대한 규탄을 고리로 여성의 임신중지권 전반을 공격하고자 한다.

이렇듯 ‘36주 낙태’ 사건의 유죄 판결이 지닌 부담함과 여성의 삶과 건강에 미칠 해악적 효과를 고려해 볼 때, 원심은 파기돼야 한다.

이 비극적 사건의 책임은 여성이 아니라 7년간 임신중지권을 방치한 국회와 정부에 있다. 의료진 또한 제도적 공백 속에서 여성의 요청에 따라 수술을 시행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2024년에 극우화한 윤석열 정부가 직접 수사를 의뢰하며 시작됐다. 해당 사건을 본보기 삼아 후기 임신중지를 공격하려 한 것인데, 그 시도가 유죄 판결로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는 임신중지를 비난해 온 극우를 고무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침묵은 무책임하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불처벌 탄원서라도 제출해 여성을 범죄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방어해야 하지 않겠는가.

후기 임신중지는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이 크다. 그럼에도 여성이 임신중지를 선택했다면 그만큼 절박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규제와 처벌은 여성들을 위태롭게 만들 뿐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후기 임신중지에도 일관되게 보장돼야 한다.

▶ 11면으로 이어짐

북아일랜드·영국

극우의 반이민 폭동을 규탄하는 대규모 맞불 시위가 거리를 뒤덮었다

6월 13일 토요일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대규모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일어나, 벨파스트 거리의 주인은 얼마 전 폭동을 일으킨 극우가 아니라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임을 보여 줬다.

남북 아일랜드 전체에서 활동하는 인종차별 반대 공동전선인 ‘인종차별에 맞서 단결’(UAR)이 소집한 그 집회에는 2만 명이 모여 “난민을 환영한다,” “우리가 벨파스트다” 하고 외쳤다. 인구 35만 명의 벨파스트 역사상 가장 큰 시위였다고 현지 활동가들은 전한다.

이 집회는 북아일랜드 곳곳에서 일어난 극우의 인종차별적 폭동에 맞선 집회였다.

극우는 6월 8일 벨파스트에서 일어난 칼부림 사건을 폭동의 계기로 삼았다. 가해자가 수단 국적의 이주민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이민자·난민의 ‘침공’ 운운하는 인종차별적 선동을 벌인 것이다. 극우의 전형적인 침소봉대다. 일론 머스크 등의 국제 극우 인사들도 여기에 가세했다.

이튿날 극우는 벨파스트 일대에서 난동을 일으켰다. 복면을 쓴 폭도들이 이주민이 운영하는 상점, 이주민이 거주하는 주택 등을 공격하고 불태우려 했다. 이주민을 겨냥한 포그롬이었다. 벨파스트 외에도 데리 등 북아일랜드



6월 13일 벨파스트 거리의 반극우 맞불 시위

곳곳에서 이런 폭동이 벌어졌다.

그러나 6월 13일 벨파스트에 모인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는 극우의 공격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다수임을 보여 줬다. 폭동 직후 북아일랜드의 노동조합들도 극우에 맞선 단결된 행동을 호소했다.

한편, 영국의 파시스트들도 벨파스트의 칼부림 사건을 기회 삼아 거리 동원을 시도했다. 영국의 극우는 불과 한 주 전 사우스햄튼에서도 다른 사건을 이용해 유사한 동원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영국 곳곳에서도 파시스트

세력에 맞선 대항 동원이 성공적으로 조직됐다. 6월 13일 토요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7,000명이 모여 파시스트 깡패 70명을 100 대 1로 압도했다. 브라이튼에서는 4,000명 대 300명, 셰필드에서는 1,000명 대 100명, 뉴캐슬에서는 350명 대 50명으로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가 파시스트 깡패를 압도했다.

유럽의 극우는 서방 지배계급이 경제·정치·지정학 위기 등에 대응해 인종차별을 부추김으로써 생긴 기회를 이용해 크게 성장해 왔다.

영국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자생하는 네트워크형 파시즘이 등장하는 한편, 공식 정치에서도 극우가 입지를 다지고 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극우인 영국개혁당이 약진했다. 영국개혁당의 더 오른쪽에는 영국회복당이라는 새로운 조직이 등장해 파시스트들과 더 노골적으로 친화성을 드러내고 있다.

북아일랜드에서는 가톨릭교도에 대한 종파적 지배와 영국 제국주의를 지지한 영연방연합주의자들의 유산을 발판 삼아 극우가 성장하고 있다.(물론 극우의 부상이 전적으로 ‘영연방연합주의 대 아일랜드 민족주의’ 구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그러나 벨파스트와 영국 각지에서 일어난 시위는 극우에 맞선 투쟁 또한 만만찮게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아일랜드의 ‘인종차별에 맞서 단결’과 영국의 ‘인종차별에 맞서자’는 기층과 지역 사회에서 꾸준히 조직을 건설한 덕분에, 어느 지역에서 극우가 공격을 시도하든 효과적으로 맞대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그 나라에서 일어난 거대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그러한 기반을 다지는 발판이 되고 있다.

이원웅

▶ 10면에서 이어짐

모성을 이유로 임신중지 공격 말라

임신중지를 선택한 여성들을 냉혹하고 나쁜 어머니로 묘사하는 것은 임신중지 반대론의 전형적인 수사다.

‘36주 낙태’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권 씨를 자신의 자녀에 관심이 별로 없는 비정한 어머니로 여긴 듯하다. 권 씨가 아이를 출산해 입양 보내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고, 수술을 받기 위해 비용을 협상했으며, 자신의 몸에 수술 흔적이 남을 지를 걱정했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지난 5월에는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17세 고

등학생에게 법원은 “어머니로서 양육과 보호의 의무가 있는데도 최소한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살인죄로 실형을 선고한 일도 있었다. 그 학생은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했고,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말이다.

그러나 모성은 여성의 타고난 본능이 아니라 역사적·사회적 조건 속에서 형성된 여성차별적 관념이다. (엘리자베트 바멩테르의 《만들어진 모성》과 시몬 드 보부아르의 《제2의 성》에 잘 나온다.)

만약 모성이 여성의 자연적 본성이

라면, 시대가 변할수록 왜 더 많은 여성들이 출산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선택을 하겠는가.

모성이 강조되는 것은 여성에게 양육과 돌봄의 책임을 떠넘기고 성차를 자연스럽게 불가피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어 여성 차별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한다.

여성에게 희생과 돌봄을 강요하는 모성 이데올로기를 근거로 여성들을 옥죄고 임신중지권을 제한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해야 한다.

ws.or.kr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긴급** 슬슬 위태로워지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중도 줄타기
- ★ 볼리비아 대중 파업이 우익 정부를 뒤흔들고 있다
- ★ 재미 한국인이 전한다 ICE 구금자 단식 투쟁과 연대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 ★ 월드컵,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
- ★ 수도권 레미콘 노동자 8일간 파업 종료 기대에 좀 못 미친 임금 6% 인상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을 보장하라

임준형

이재명 정부가 일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양성화'를 검토하고 있다.

6월 15일 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는 고용허가제를 개편해 숙련 이주노동자에게 6년 이상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한국어를 잘하고 숙련도가 높은 일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부처 간 이견으로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가 반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6월 14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 촉구 오체투지 행진'이 이주인권 단체들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 행동을 발의한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 장 이영 성공회 신부는 간절한 마음으로 식발까지 하고 집회를 이끌었다.

주최 측은 모든 미등록 이주민의 조건 없는 체류권 보장, 정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론화를 통한 체류권 보장 로드맵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100여 명이 집회에 참가했다. 미등록 이주민을 포함해 많은 이주민이 몸소 참가했고, 마석에서 필리핀인 공동체가 버스를 대절해서 참가하러 오기도 했다. 국지성 집중 호우가 쏟아지는 곳은 날씨에도 참가자 대부분이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청와대 앞 행진까지 함께 했다.

뿌리내린 사람들

이 집회는 단속 중단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나아가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을 핵심 요구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올해 4월 기준 미등록 이주민은 약 35만 명으로, 전체 이주민의 12퍼센트를 차지한다. 그중 체류 기간이 5년을 넘는 미등록 이주민이 절반 이상이다. 그만큼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체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14일

정부가 일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양성화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이주노동자의 기여가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집회에서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자만 씨가 한 발언은 그 고통을 생생하게 보여 줬다.

“비자가 없어서 누가 때려도, 욕해도, 월급 못 받아도 경찰한테 못 가고 있습니다.

“저는 쌍둥이 아들이 있어요. 병원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카드 없어서 병원비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밖에 나갈 때도 잡혀갈까 봐 걱정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는 침대는 우리 마석가구공단에서도 만들고 있습니다. ... 우리도 단속이라는 악몽을 꾸지 않고, 여러분처럼 편히 자고 싶습니다.”

자만 씨의 말처럼,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열악한 조건을 감내하며 한국 경제의 밑바닥을 지탱하고 있다. 조선업 등 한국 경제의 핵심 부문에서 하청 노동자로 일하는 경우도 많다. 농업 부문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로 의존도가 높다.

정부가 일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양성화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이주노동자의 기여가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한국어 능력과 숙련도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선별적으로 체류권을 허용하려 한다. 그런 노동력을 길러 내는 데 돈 한 푼 들이지 않으면서 말이다.

14일 집회 참가자들이 요구한 것처럼, 모든 미등록 이주민에게 조건 없이 전면적 체류권을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체류권을 얻은 뒤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장기 체류와 건강보험 등 복지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



6월 14일 미등록 이주민 체류 보장 촉구 집회에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100여 명이 참가했다

이주민 운동과 경제적 필요가 맞물린 스페인의 합법화 사례

올해 1월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정부가 수십만 명의 미등록 이주민에게 합법적 체류 지위와 노동할 권리를 부여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주민들은 축제 분위기였다.

스페인 정부는 이전에도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 조치를 여러 차례 시행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유럽에서 이민 인종차별이 득세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스페인 사회당(PSOE) 소속 산체스 총리가 일관되게 이주민을 옹호해 온 것은 아니다. 그는 2022년 모로코에서 북아프리카의 스페인 자치령 멜리야로 월경하려던 이주민을 폭력적으로 저지한 경찰을 칭찬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이주민 운동의 압력과 스페인 자본주의의 경제적 필요가 맞물린 결과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부터 카탈루

냐 지역 이주민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청원 운동이 전개됐다. 이들은 약 70만 명의 서명을 모아 의회 입법 논의를 이끌어 냈다. 이런 압력이 존재하는 가운데 팬데믹 이후 경기 회복으로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자 스페인 정부가 대규모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스페인은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나라 중 하나로, 이주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이주민 일부에게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등 정책을 개선하려 한다. 그러나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없다면 이러한 개선은 매우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극우 세력이 인종차별 선동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극우 자유통일당 이강산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 '불법체류자 추방'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그런 사례다. 이주민 방어 운동을 조직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사진: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